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론태림



“예스맨(yes man)’의 언론이 ‘도요타 사태’를 일으켰다.”

요즈음 ‘도요타 자동차’의 천문학적 리콜사태로 세계가 놀라고 있고, 일본인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이다. 그 원인에 대해, 일본인들은 “산업계의 자만심과 오만의 결과”라고 한탄한다.

일본인 일각에서는 “‘예스맨’만의 언론이 각종 개혁의 물꼬를 막아왔다”, “광고에 포로가 된 언론들에서 비판정신이 실종된 결과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도요타 사태’를 남의 나라의 불행이나 불구하고 바라보기만 있을 처지인가? ‘예스맨’ 언론이 남의 나라 일인가?

한국사회는 역사 아래 지금까지 한번도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려 본 적이 없다. 조선 시대, 구한말, 일제식민지시대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북 분단과 6·25동란의 후유증으로, 민주와 자유를 주장하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

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운동들이, 독재로 치닫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걸핏하면 “빨갱이다”, “좌익이다”라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왔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다.

다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이 소아병적 심리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소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1960년대 ~1980년대까지의 한국사회를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 두 세력은 갈등관계 내지는 긴밀관계인 것처럼 인식해왔다. 과연 길항관계인가?

아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분업과 협동의 관계로 인식되어야만 그 사회의 시민민주주의는 제대로 성숙할 수 있다. 과

거를 돌아보자.

도그마적 중세종교가 인간의식을 지배하며 천동설(天動說)을 강요하던 종세에서 어떻게 달나라 탐험이 가능하겠는가? 신분계급사회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노(農奴)로 밭이 둑인 사회에서 어떻게 증기기관, 철도, 증기기선, 자동차, 비행기가 생겨나고 에너지혁명,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신, 전화, 라디오, TV, 휴대폰, 인터넷 같은 전자·통신혁명을 중세의 ‘사상 감옥’ 속에서 꿈이나 꿈이 있었겠는가?

근현대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발전이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성숙해진 시민민주주의 사회에서부터 먼저 생생 발전해 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오늘날에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미숙아이다. 더구나 21세기 하 고도 10년이나 지난 요즈음 표현의 자유는 더 성숙해지기는 커녕, 역주행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한국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활짝 꽂 꽂을 때, 한민족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의 ‘촛불집회’를 제멋대로 ‘불법집회’로 지목하고, 그때 ‘촛불집회’에 이름을 올렸던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 “앞으로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 참여했을 때는 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각서’ 형태로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이 어거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듯, 여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부닥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억압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지겨워질 정도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주행은 국민이 스텝시켜야 한다. 또한 다시 덧붙이건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표현의 자유’를 마치 산업화 사회의 방해꾼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란세력쯤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의 중세인’들이 있다면, 일본 산업사회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야 말로 중세인의 치꺼기를 완전히 털어내 버리면 좋겠다.

한국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활짝 꽂 꽂을 때, 한민족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흔들리는 지역 주력산업 체질 개선해야

건설과 조선 등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건설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주락으로 고사 직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업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지난 4년 사이에 4곳 중 1곳(27.9%)이 사라졌다 고 한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평균(7.4%)의 4배에 육박한 것이다. 지역건설 경기가 최악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조선업도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57개 조선소 중 들어 수주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수주 물량도 그나마 10만t 이상의 중형급 이상 선박은 1척도 없다. 더욱이 도내 수주물량은 내년이 지나면 모두 소진돼 앞으로 수주를 못 할 경우 대량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는 지

민주당 잘못 인정한 기초 선거구 쪼개기

민주당 면역이 말이 아니다. 도의원 공천현금 연루 의혹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광주시의회가 주도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말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광주시의회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그렇게 한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두 명을 뽑는 선거구가 2곳 있다면 한 곳은 두 명을 공천하는데 다른 한 곳은 한 명만 공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공천권은 시·도당에 있는 만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대안론까지 제시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잘못을 인정한 것은 소수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주당의 덮밥인 광주

에서 ‘소리’가 나면 수도권 등지에 악영향을 미쳐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강박원 시의장의 18일 발언에 대한 해명과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당시 강 의장은 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이심전심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와서 “광주시당의 개입은 없었다”고 한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의 악화에 따라 본의회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당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영민 대변인이 제시한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그에 준하는 일정 부문 후보를 내지 않거나 1명만 공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미 저울찌 넘긴다면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無等鼓

짧은 머리에 가죽 점퍼 차림으로 3~10명씩 무리 지어 다니며 유색인종을 폭행하는 러시아 인종주의자들. 이른바 ‘스킨헤드(Skin Head)’로 불리는 이들 조직은 모스크바에만 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헤드는 지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소련) 붕괴와 함께 생겨나 러시아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 경제상황

이 악화하면서 국수주의자들과 네오나치주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러시아 젊은이의

15% 가까이는 극우

파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융위기가 다

친 후 스킨헤드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유색인종이 그들의 일터를 빼앗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며 인종범죄를 저

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스킨헤드들은 자신들이 신봉하

는 나치주의에 따라 허리를 생길인 4월

20일을 전후해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을 상대로 종종 공격해 왔다.

/박지경 사회부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채숙희

아버지는 슬하에 오남매를 두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자식을 가르치셨고, 딸 아들 차별 두지 않고 모두 대학을 보내셨다. 교육만큼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었지만 아버지는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라 가부장제(家父長制)의 관념이 강하였다. 여성의 역할로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였고, 명절 친정에 온 나에게 항상 자녀, 남편, 시부모님 안부를 당부하였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호소하고, 시댁 어른들은 결혼을 하였으니 당연하게 설날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며느리를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음식준비로 지친 동서는 훌로 계신 친정어머니 생각에 속이 상한다.

드라마에만 있는 이야기일까? 설날 TV인터뷰 중에 ‘북적이는 시댁과는 다르게 풀풀하게 계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은 친정에 가 있다’는 여성의 말은 설문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배려한 설 문화, 모두의 행복

“어서 가라”며 등 떠밀어 보내고는 하였다. 난 “딸자식은 자식 아니냐”라며 서운한 마음에 털털거리기도 하였다.

아버지께서 여든을 넘기시더니 작년 불 치매가 왔다. 치매는 당신을 억눌렀던 관습과 습관을 하나씩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 간병을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네 집이 여긴데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아! 아버지.. 난 아버지의 노여움 속에 오랜 세월동안 딸을 곁에 두고 싶었으나 매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부장제라는 관습으로 헐저히 누르고 마음에도 없는 표현을 하셨던 것이다.

설날 어느 드라마에서 결혼한 딸을 시댁으로 보내고 아버지 혼자 차례를 지내며 눈물짓고, “시댁은 차례 준비할 시숙과 둘째들이 있지만 딸은 둘째는 가정의 책임감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한 많은 남성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광주여성의 전화 대표>

기고



이영상

최근 신문지상에는 낙동강 퇴적토에서 출몰된 독성물질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요즘 소비자들은 격려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흙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맛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이미 우리 농업도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진행해 가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농밭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40여 년 넘게 계속된 화학비료의 남용

며,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도열병이나 도복방지를 위하여 석회 및 규산질을 공급하여 토양체질을 개량해 주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 36개 시군에서 실시한 맞춤형 비료 시범 사업을 분석한 결과 관행적인 화학비료 시비에 비료 사용량 16.4%와 지출비용 18.1%가 절감됐다고 한다.

특히,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된 맞춤형 비료는 2009년 복合肥비료에 비해

맞춤형 비료 사용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으로 지역이 많이 펼쳐져 있다. 이로 인해 병해충 발생과 영농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비료 사용실태를 보면 단위면적 당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우리 농가는 평균적으로 화학비료를 표준 시비량보다 10% 이상 과다 사용하고 있고 축분비료도 옛날 산야초, 뿌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가 자마다 다르듯 흙 또한 다 같은 흙이 아니다. 저마다 토질이 다르고 땅심도 제 각각으로 필요한 양분이 다르다. 또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흙도 다를 바 없다. 논밭의 흙도 검사하고(토양검정) 그에 맞는 처방(토양진단)을 받아 필요한 치료(토양개량)를 해 줘야 한다.

토양검정에 따라 비료사용량을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고 대신 토양과 환경에 영향이 적은 맞춤형 비료 또는 신종 저성분 복合肥비료를 시비하여야 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총괄팀 차장’

공급가격이 평균 27% 인하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비료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비료의 20kg 한 포당 판매가격은 1만2천380원으로 기존 화학비료 1만6천480원에 비해 4천100원이 내렸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맞춤형 비료 지원 기준으로 20kg 한 포당 1천800원 수준을 확보, 20kg 한 포당 1천800원 수준을 보조해 준다.

이에 전남농협에서는 시군별 맞춤형 비료 예산수요량 722만 포를 예약발주하였으며, 영농철 이전 적기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제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비료를 적당히 눈여겨 뿐이라는 시대는 지났다. 늦었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보조가 시작되는 올해부터라도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시비 습관을 바꾸고, 토양 특성을 고려하는 영농관행이 정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잊어버린 땅심을 되살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우리 터전을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업생산을 높여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올해는 토양개량과 함께 토양비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유익한 흙 속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p